



우원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

야권, 탄핵안 재발의·수사 가속도... '투트랙' 압박

민주, 회기 쪼개 14일 본회의 표결 “김건희 특검, 상설특검으로 전환”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경찰, 150명 투입 특별수사단 격상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권은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속도를 높이며 계엄 세력에 대한 ‘투트랙’ 압박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재발의한 뒤 14일 표결에 부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의해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폐기됐다. 탄핵안은 같은 회기에 재발의 할 수 없

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회기를 쪼갤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로 나뉘는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쪼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연달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토요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 원인”이라며 “(상설특검을 추진해서라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

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현 검찰 특수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후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고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가 ‘강푹푹’으로 밝혀졌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공관·집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대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 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도 확보했다.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시작돼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던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을 따져 거절했다. 법령 적용·영장 신청 등 수사준칙에 근거해서는 협력할 방침”이라며 “현재 전담수사팀에 중대범죄수사과 등 30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

수사단(경력 150명)으로 격상했다.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면서 ‘수사 주도권 향방’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경은 공수처장의 수사 이첩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검·경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초동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野 3당 “검·경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 못맡겨”

“내란죄 직접 수사는 국수본 유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경찰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며 “국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또 “내란 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

의 기록, 군 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12·3 내란사태의 실체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초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진실은 특검으로서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을 일으킨 혐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조정장을 직위 해제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용현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 대북 국지전 의혹도

불법 계엄 전모 속속 드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군 고위지휘관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등 불법 계엄 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을 발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그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합참 작전본부장 또한 이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상계엄 발령 당시 핵심 지휘관이었던 광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전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도 했다. 광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를 항의방문하자 면담에 응한 뒤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

위 시설 확보 및 외곽 경비, 여론조사 쫓아도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홍창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싸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그는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정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승민 김어준 씨 등 명단을 불렀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